

# 경찰 관련 주요 보도 [조간]

2023. 6. 9.(금)

## □ 경남 기사

- “몇 억씩 주고 산 리조트·골프장 회원권 휴지조각” (도민일보)
  - 밀양 S파크리조트 회원 집회
- 창원시의회 ‘스토킹 방지’ 조례 제정 추진 (도민일보)
  - 예방·피해자 보호 등 담아

홍 보 담 당 관 실

##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중단 철저히 규명하라”

민간 사업자 횡령 등 좌초 위기  
시민단체 ‘군 허술 행정’ 지적  
의회 보고 누락 기망행위 주장  
고발·구상권 청구 등 조치 예고

민간 사업자 횡령 사태로 좌초 위기에 몰린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과 관련해 명확한 진상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 ▶ 2일 자 1면 보도

합천지역 시민단체 ‘함께하는 합천’은 8일 군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과 철저한 수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본 뒤 고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합천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1607㎡(486평)터에 민간 자본 590억 원(대출금 550억 원, 시행사 자부담 40억 원)을 들여 전체 면적 7336㎡(2219평)에 7층, 200실 규모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민간 시행사 대표가 거액 대출금을 가지고 잠적해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채무 보증을 선 합천군은 최대 3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함께하는 합천은 허술한 행정을 지적했다. 이들은 “인터넷 정보 검색만

하더라도 시행사가 호텔 운영과는 거리가 먼 업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며 “수십 분만 들여도 알 수 있는 정보를 군이 검증하지 않은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사 정보를 잘 몰랐다면 직무유기요, 알았다면 비위행위로 점철된 공무원 부패임이 분명하다. 합천군은 감사와 수사 요청만으로 상황을 면피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문변호사 이야기도 꺼냈다. “실시협약을 앞두고 합천군 고문변호사가 불리한 조건임을 지적, 계약 수정을 권고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합천군이 전문가 권고도 무시한 채 협약을 강행한 것은 무능인지 부패 때문인

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하는 합천은 협약 당시 군의회 보고 누락 내용을 언급했다. 이들은 “당시 채무보증 사실을 정확히 인지할 수 없도록 애매한 문구로 감춰 군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며 “이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예산의 의무부담을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군민 대표 기관인 의회를 기망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시와 견제로 이 사건을 예방했어야 할 군의회도 자신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임시회를 소집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하는 합천은 정확한 진상 규명과 함께 전방위 경찰 수사도 요구했다. 이들은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과 실체가 정확히 규명돼야 한다”면서 “잠적한 시행사 대표를 쫓는 것뿐만 아니라 전임 군수를 비롯해 호텔 건립과 관련된 공무원 비위 혐의에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 노력과 수사가 미진할 경우 고발 조치를 비롯해 구상권 청구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합천군은 지난달 31일 시행사 대표 등 4명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공무원 비위 행위 등에 관해서는 5일 경상남도에 감사를 청구한 상태이다. 현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김태섭 기자 kimtsq@idomin.com

< 광수대 통보 >

## “몇 억씩 주고 산 리조트·골프장 회원권 휴지조각”

밀양 S파크리조트 회원 집회  
“리조트는 세워지지도 않고  
골프장 회원 넘쳐 이용 못 해”  
시 공공사업 책임론 제기도



밀양시 농어촌휴양관광단지 내 S파크리조트 회원협의체 소속 100여 명이 8일 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이일균 기자

밀양시 단장면에 조성 중인 농어촌휴양관광단지 내 S파크리조트 회원들이 “몇 억을 주고 산 회원권이 휴지조각이 됐다”며 항의집회를 벌였다. 이들 주장은 회원권 행사를 넘어 밀양시가 추진하는 농어촌휴양관광단지사업 정체성까지 겨냥한다.

▶ 4월 25일 자 2면 보도

8일 밀양시청 앞 집회에서 S파크리조트회원협의체 소속 100여 명은 “골프장과 리조트가 들어서면 우선 이용한다는 조건으로 적게는 1억 8000만 원부터 많게는 5억 원까지 모두 472명(계좌)이 1700억 원(추정액)이 넘는 청약계약을 했다”면서 “리조트는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고, 골프장은 회원이 넘쳐 한 달에 한 번도 이용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골프장 운영업체인 SC홀딩스는 이를 시정하려 하지는 않고, 회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결국 골프장은 문을 닫게 된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면서 “골프장을 포함한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사업은 애초에 밀양시가 계획하고, 공무원들이 대거 포진한 농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단이 시행사로 돼 있다. 이 사태 책임은 밀양시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 뒤 밀양시 공무원들과 면담한 이들은 △현재 472개에 이르는 계좌를 250개로 줄여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률을 높일 것 △회원들의 재산상 피해에 대비해 골프장과 리조트 지분권을 부여할 것 △사태가 여기까지 온 점에 대해 농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단이 공식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밀양시가 단장면 미촌리 일대 91만㎡에 농촌테마공원과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스포츠파크 등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인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

는 사업이다. 이 중 올 4월 개장한 18홀 규모 골프장과 아직 착공하지 않은 100실 규모 리조트 건설 등 민간사업부분을 맡은 SC홀딩스와, 두 시설 조성과정에서 청약에 참여했던 회원들 간에 이같은 분쟁이 생긴 것이다.

회원들은 “밀양시는 이 사업을 농어촌휴양관광단지라는 공익 목적 공공사업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는 몇 억 원씩 청약금을 내놓고는 골프장도 리조트도 이용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고, 시행사는 그 돈으로 골프장을 지었다”면서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나? 이게 과연 밀양시가 내세우는 공공사업의 실체냐”고 따지기도 했다.

면담에 나선 이희일 나노경제국장 등 공무원들은 “밀양시나 농어촌휴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내용을 파악하고 입장을 정리해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골프장 시행사인 SC홀딩스 관계자는 “환불 신청을 한 50명 이상의 회원들 계좌가 곧 줄어들면 골프장 이용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며 “골프장과 리조트를 우선 이용한다는 당초 청약계약 내용도 2020년 이후 회원들과 합의를 거쳐 인터넷 예약 때 일부 할인 혜택을 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100% 전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 정보과 통보 >



## “불법 대체생산 중단하고 고용승계 해결해야”

한국와이퍼 안산노동자, 창원서 집회  
창원·日 덴소 본사 항의방문 예정

속보= 회사의 공장 청산 절차에 맞선 한국와이퍼 안산공장 노동자들이 회사의 대체생산지로 추정되는 창원에 모여 투쟁에 나섰다. (3월 6일 온라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 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는 8일 오후 창원 덴소코리아와 (주)엘소, (주)대흥공업을 순회하면서 대체생산 금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와이퍼는 일본 덴소가 100% 출자한 기업 (일본 덴소 38.25%·덴소와이퍼시스템즈 61.75%)으로 와이퍼 블레이드·암을 생산하고, 와이퍼를 조립해 만들어진 제품은 현대·기아차로 납품한다. 노조는 창원에 위치한 두 공장에서 한국와이퍼 생산물량을 대체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현철 금속노조 시흥안산지역지회장은 “사측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대체생산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어기고 창원에 위치한 두 공장에서 대체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 대체생산으로 노조 파업의 영향력을 상실시키고 시간을 끌며 노동자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에 따르면 최근 이들 노조는 한국와이퍼 사측과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가 8일 창원에 위치한 (주)대흥에서 대체생산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고용승계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교섭을 4차례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8일부터 창원과 일본 덴소 본사를 찾아 항의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오는 20일 열리는 덴소 최대주주인 도요타 주주총회에 일본 내 노동·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해 ‘고용 승계’를 촉구한다. 정 지회장은 “창원에서도 지속적인 항의 방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와이퍼 노사 간 갈등은 덴소가 자동차 와이퍼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한 지난해 7월부터 본격화됐다. 사측이 노동자 284명을 조기 퇴직신청하라고 통보한데 이어 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냈으나 노조가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회사 측은 청산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공장 내 생산 설비 일부를 매각한다고 노조에 통보하면서 갈등이 진행되고 있다. 글·사진= 어태희 기자

< 정보과 통보 >

## 경남 지역안전 범죄지수 '최하위'... CCTV 개수 '전국 꼴찌'

도의회 정례회 백태현 의원 지적  
지난해 기준 도내 CCTV 85.64개  
전국 도평균 110.68개와 차이 커  
안전지수 범죄분야 2년 연속 하위

경남도가 2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 등급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방범용 CCTV 개수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열린 제405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남도의 방범용 CCTV 수는 2022년 85.64개(인구 1만명당)로 전국 9개 도 지역에서 가장 적었으며, 평균인 110.68개와 큰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경남의 2020년 CCTV 수는 70.05개로 도 평균 71.90개와 큰 차이가 없지만

2021년(경남 78.87개/전국 도 평균 95.03개) 이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에 도정질문에 나선 백태현 의원(국민의힘, 창원2)은 "행안부의 지역안전지수에서 경남이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경남의 방범용 CCTV 수가 전국 도 평균에 못 미치는 데다 해마다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태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민선8기 출범 후 위원회도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타 시도가 우리 도에 비해 더 열심히 한 것 같고 상대적으로 평가이다 보니 4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CCTV 설치 지수가 격차가 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방범목적 또는 유사목적으로 사용되는 CCTV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등록시에 이를 범죄예방 이외의 분야로 설치 목적을 달리하면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도 자치경

찰위원회는 2026년까지 총 136억원 투입해서 2000여대 지능형 CCTV를 교체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도지사가 되고 가장 중점을 기울인 분야가 도민안전인데, 지역안전지수 6개 중 종합적 평가에서는 도가 두 번째인데, 범죄분야 지수가 하위권"이라며 "범죄분야의 평가 지표가 경찰관서수나 CCTV, 자율방범대수, 아동안전지킴이수 등이 중요한 것 같다. 도와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도교육청이 팀을 이뤄 같이 노력해서 다음 평가에서는 지역안전지수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에서 4등급을 기록했으며, 9개 도 지역 중 인구 1만명당 5대 주요범죄 발생건수는 7위, 경찰관서 수는 6위, 범죄예방 CCTV 대수는 9위, 자율방범대원 수는 7위를 기록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 생안과 통보 >



# 인구 늘어 '몸집' 커진 양산 행정·경찰 인력은 '제자리'

## “공무원 증원 해달라” 여론 비등

신도시 조성으로 경남 양산시 인구가 늘면서 행정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행정과 경찰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8일 양산시와 시의회, 양산경찰서 직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4월 말 양산 인구는 35만 4004명이며, 공무원 정원은 1368명이다. 반면 같은 달 비슷한 인구(34만 8047명) 규모를 가진 진주시 공무원 정원은 1812명으로, 양산시보다 오히려 444명이 더 많다.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도 양산시 259명, 진주시 192명으로 양산시가 67명이 더 많다.

반면 인구 10만 6300명의 밀양시 공무원 정원은 1077명으로, 양산시보다 불과 291명 적다.

이처럼 공무원 정원 차이는 1995년 진주시와 진양군, 밀양시와 밀양군이 통합하는 등 전국적으로 도농 통합이 이뤄지자, 정부가 이들 자치단체 특수성을 인정해 단일 자치단체와 기준인건비 산정 배경 기준을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지난달 행안부를 찾아 기준인건비를 현재 시 정원인 1368명인 1192억 원으로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현재 양산시 기준인건비

를 1269명에 1121억 원으로 책정해 놓은 상태다.

양산시의회도 지난 1일 김석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산시 기준인건비 증액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행안부 등 관련기관에 발송했다.

양산경찰서 역시 정원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양산경찰서 직장협의회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기준 양산경찰서(정원 446명) 1인당 주민 담당 수는 797명이다. 이는 경남 평균 411명, 전국 평균 464명에 비해 월등히 높다. 경남에서 규모가 비슷한 인근 김해중부경찰서(정원 495명) 580명, 진주경찰서(정원 534명) 648명에 비해서도 높다.

2022년 1분기 기준 지역 경찰 1인당 신고 처리 건수도 21.5건으로 김해중부경찰서 18.2건, 진주경찰서 16.8건보다 많다. 2021년 기준으로 실제 출동한 112신고 현황도 양산경찰서 하루 평균 165건으로 경남 평균 70건, 전국 평균 112건보다 많다.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양산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제때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력 부족에 따른 격무는 물론 치안 서비스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

< 경무과 통보 >

# 가로수에 가려져... 제구실 못하는 교통표지판

진해 초등학교 앞 등 도심 곳곳  
도로까지 뻗은 나뭇가지 안전 위험  
우회전·속도제한 등 표시 안보여  
지자체 "점검 후 일괄 정비할 것"

도시의 미관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식재된 가로수가 도로교통표지판을 가리는 문제로 운전자 시야 확보와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오전 9시께 찾은 창원시 진해구 자은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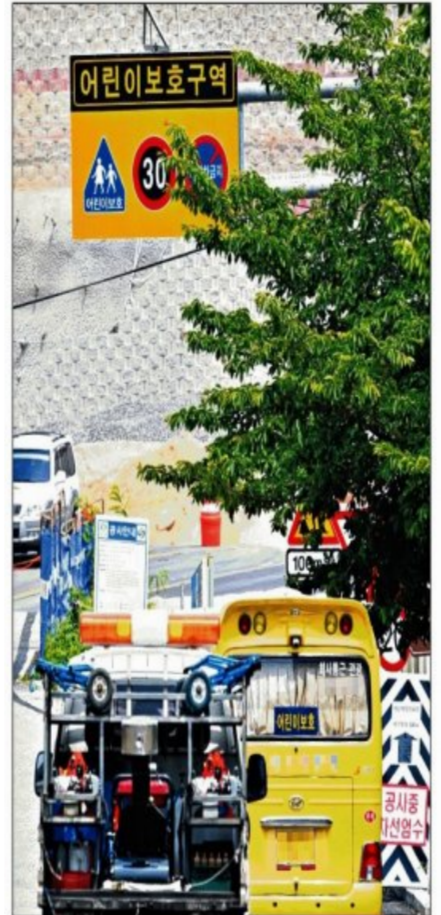
인근 아파트 화단을 따라 식재된 나뭇가지들이 도로까지 뻗어나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일부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해당 표지판 앞쪽으로는 해군해양의료원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나 있어 차량 통행량이 많은 모습이었다. 인근 아파트 주민 이성희(60)씨는 "여기는 해양의료원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뚫려 있어서 차들이 많이 다닌다. 초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불안해서 매일같이 아이의 등하교를 챙기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가리는 나뭇가지를 빨리 잘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진해대로. 본지 취재진이 석동 3호광장사거리에서 진해구청 방면 3km 구간을 운전해 본 결과, 다수의 교통안내표지판이 길을 따라 식재된 가로수들에 가려져 있었다. 특히 인도와 밀접해 있는 우회전 교통안내표지판은 우거진 가로수에 의해 완전히 가려져, 표지판 바로 아래까지 가야만 확인이 가능했다. 운전자 김모(60대)씨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보긴 하는데 한 번씩 길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표지판을 보면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 답답한 적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 외에도 도심 곳곳에서 보행자, 속도제한, 과속방지턱 주의 등을 알리는 도로교통 표지판들이 가로수에 의해 가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진해구청은 문제가 되는 가로수 정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로의 경우 교통량이 많아 정비작업이 위험한 관계로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진해구청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일반 도로 가로수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점검을 통해서 수시로 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차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는 작업이 위험해서 정비가 필요한 가로수들을 점검해 조경업체에 위탁을 맡겨 일괄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현 기자



지난 7일 창원시 진해구 자은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 공사 중 도로교통표지판 등 일부가 가로수에 가려져 있다./김승권 기자/

< 교통과 통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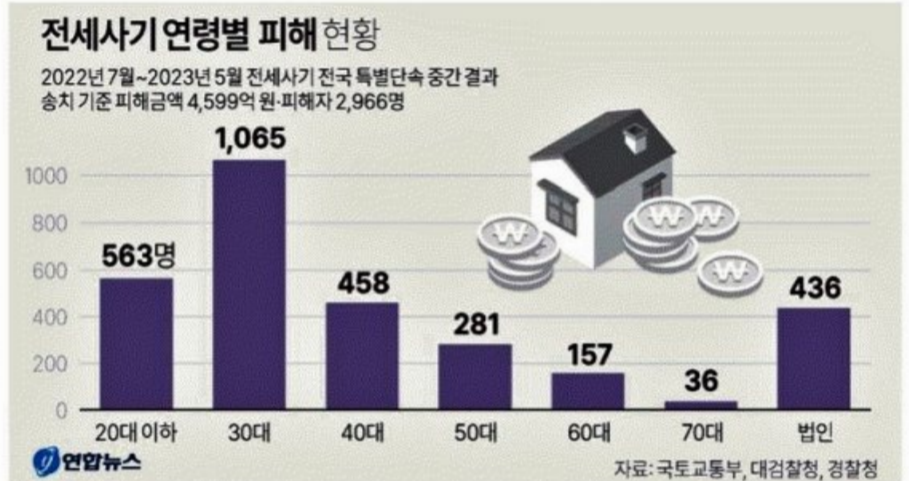
## 무자본 갥투자·불법 중개 등 부산 전세사기 274명 검거

정부 특별단속 중간 결과 발표  
전국 2895명 검거 288명 구속  
울산 207명·경남 87명 불잡혀  
대규모 사기 조직 31곳도 적발  
공인중개사 486명도 함께 검거  
각 검찰청 전담검사 71명 지정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3000명에 가까운 전세사기범을 검거했다. 특히 부산은 검거 인원 274명, 검거 건수 66건 등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는 8일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해 전세사기 사범 총 2895명을 검거하고 이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1차 단속을 했으며, 올해 1월 25일부터 오는 7월 24일까지 2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갥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해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외에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이번 전세사기 검거에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경찰은 '무자본 갥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 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지역에서 전세사기 검거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검거 인원을 살펴보면 경기도 남부가 651명(56명 구속), 서울 623명(62명 구속), 인천 389명(31명 구속), 부산 274명(18명 구속) 순이었다. 울산은 207명(39명 구속), 경남은 87명(12명 구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전세사기 검거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도 남부가 2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137건), 인천(80건) 순이었다. 부산은 66건, 울산은 68건, 경남은 60건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부산 부산진구, 동래구 등 오피스텔 6곳에서 전세금 약 6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범 총 2895명을 검거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강통전세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한 이어말하기'에서 피해자가 발언하는 모습. 한경뉴스

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 능력 없이 부산지역 6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62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62억여 원을 교부해 취득했다. 이 씨는 배달대행기사로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가 대표이사로 등록된 법인 감사와 관련자

등 5명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수사를 확대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한편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했으며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 발

생 시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 국토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단속을 마친 뒤 최종 단속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나웅기·김덕준 기자 wonggy@busan.com

< 수사과 통보 >



### 진주경찰서, 편의점 대상 범죄예방활동 전개

진주경찰서는 편의점 대상 범죄예방홍보 활동 및 방법 시설 점검에 나섰다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도내에서 편의점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수범에 대한 내용과 예방법 및 범죄 발생 시 대응 요령을 홍보하고, 긴급신고시스템 설치 여부, CCTV의 대수 및 각도 등 방법 시설물을 점검했다.

특히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설치된 편의점에 대해 지역경찰의 탄력순찰 노선에 지정하여 집중 순찰 및 거점 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용교기자

### < 참고기사 >



### 산청경찰서 마약 예방 캠페인 동참

산청경찰서는 8일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마약 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NO EXIT'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고취해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시작된 범국민 캠페인이다.

원경복기자

### < 참고기사 >



### 산청군·산청경찰서 마약 범죄 근절 캠페인

산청군과 산청경찰서가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캠페인에 송진섭 산청경찰서장은 이승화 산청군수를 지목하고, 이 군수는 정명순 산청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고동우 기자

### < 참고기사 >



## 경남도민일보

2023년 6월 9일 금요일 015면 사람들



### 박종훈 경남교육감 마약 예방 캠페인 동참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지난 7일 '마약 예방 온라인 이 어달리기 캠페인'에 동참했다. 박 교육감은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라는 내용을 알렸고, 다음 주자로 남길우 경남신문 대표이사 회장과 오경문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목했다. /이동욱 기자

< 참고기사 >

## 慶南日報

2023년 6월 9일 금요일 010면 사람



### 이상근 고성군수, NO EXIT 캠페인 참여

이상근 고성군수가 8일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출구 없음(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군수는 "마약 투약은 한 사람의 인생을 절망으로 떨어뜨리고 가정과 사회까지 병들게 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청정도시 고성을 위해 협력 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재기자

< 참고기사 >

## 경남신문

2023년 6월 9일 금요일 018면 사람

### 이외숙 진주교육장

이외숙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난 7일 '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으로 촬영해 SNS에 게시하고 다음 주자를 추천해 챌린지 전파를 통해 마약 퇴치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숙 교육장은 "교육지원청도 마



약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마약 퇴치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태 기자

< 참고기사 >



## 의령경찰서, 노인대학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의령경찰서(서장 신경범)는 지난 2일 대한노인회 의령지부 노인대학에서 고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서는 보행 안전 3원칙 '서다-보다-걷다' 교육은 물론, 다양한 시청각 자료로 노인 교통사고 사례, 이륜차 안전교육, 보행 보조차 안전 수칙 등을 다루며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했다. 김명현 기자

< 참고기사 >



## “억대 분양권에도 골프 부킹 안 된다”

밀양 에스파크리조트 회원  
8일 밀양시청 앞 반발 집회

상반기 경남 밀양시에 문을 연 한 골프리조트의 일부 회원들이 수억 원 주고 분양권을 샀지만 골프장 부킹이 어렵고, 리조트 착공까지 하지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밀양 에스파크골프리조트 회원협의체 회원 130여 명은 8일 오전 밀양시청 앞에서 골프부킹 정상화, 리조트 공사 시작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 이 골프리조트는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에 있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부속시설인 1

8홀 대중 골프장을 운영한다. 밀양시가 지분 20%를 가진 특수목적법인이 조성 중인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나뉜다. 골프장과 리조트를 포함한 골프리조트는 민간 시설에 속한다.

회원협의체는 에스파크골프리조트가 사업비를 조달하고자 편법으로 골프장 회원을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에스파크골프리조트가 리조트 분양 명목으로 구좌 당 2억~5억 원씩을 받는 대신 투자 금액에 따라 골프장 부킹 혜택,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과다하게 모았다고 지적했다.

분양자들은 “에스파크골프리조트가

당초 200구좌를 분양한다고 했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472구좌를 분양했고 이마저도 불투명해 분양자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골프장은 지난 4월 29일 개장했다.

회원협의체는 “분양자가 당초 계획보다 너무 많고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아 골프장 부킹 자체가 안된다”고 밝혔다. 한 분양자는 “밀양시가 지분을 가졌다고 해 수억 원씩 넣었는데 골프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밀양시는 수수방관만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밀양시는 “시가 특수목적법인 20% 지분을 갖고 있지만, 골프장 운영은 민간 영역이라 관여할 부분이 없다”면서 “자재값 상승으로 리조트 공사가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 착공을 독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길수 기자 kks66@

### < 정보과 통보 >

## 경남신문

### 도, 전세사기 피해 대응 특별팀 가동한다

기존 부동산정책 특별팀서 전환·가동  
시군·수사기관·중개사협회 등 협력

경남도가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 등의 피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세피해 대응 특별팀(TF)

을 가동했다.

도는 지난 7일 기존 부동산정책 특별팀(TF)을 전세피해 대응 특별팀(TF)으로 전환·가동해 ‘제1회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별팀의 실무팀은 도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경찰청, 6개 시·군, 자문단에는 한국은행, 한

국부동산원, 부동산학과 교수,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등이 참여한다.

이날 협력 회의에서는 △도내 전세 피해 현황과 피해지원·수사 상황 공유 △전세피해 현황, 적정 전세가를, 부동산 시세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협의의 △경남도의 전세피해 지원대책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 등을 모색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현상에 의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시장의 최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우려 지역, 우려 사례들을 유관기관에 공유해 거래가격 검증 및 피해사실 조사를 통해 선제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군·수사기관·공인중개사 협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창원과 김

해, 함안, 사천 등 전세피해 사례가 알려진 곳뿐만 아니라 향후 전세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서도 피해지원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피해 사실 조사와 정보를 공유할 것을 협의했다.

허동식 도 도시주택국장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대책 및 기존 도에서 지원하는 대책들이 피해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고윤 기자

2023년 6월 9일 금요일 002면 종합

### < 참고기사 >

## 창원시의회 ‘스토킹 방지’ 조례 제정 추진

### 예방·피해자 보호 등 담아

7월 18일 시행하는 ‘스토킹 방지·피해자 보호 법률’에 맞춰 창원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오은옥(더불어민주당, 비례)창원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이 참여한 ‘창원시 스톱킹 방지·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정부는 스톱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스톱킹 방지·피해자 보호 법률을 지난 1월 17일 제정해 오는 7월 18일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스톱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국가 책무, 3년 주기 실태 조사, 피해자 등 불이익조치 금지, 취약 지원, 지원 시설 설치, 경찰 현장 출동 근거 등이다.

창원시 조례안에는 스톱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창원시장이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근거

가 담겼다. 시책에 스톱킹 신고체계 구축·운영, 예방교육·홍보, 사건 발생 때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했고, 지원사업으로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과 의료 지원 등을 명시했다. 스톱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 등 비밀 유지 의무와 수사기관·사법기관·교육청·다른 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조항도 있다.

오은옥 시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에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며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예방 대책 등을 수립할 근거가 확실히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를 만들거나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등 조례를 바탕으로 스톱킹 방지·피해자 보호 논의가 더 구체화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이창언 기자 un@idomin.com

< 참고기사 >



##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내 방범용 CCTV 설치율

도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 개수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을 경남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8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남도의 방범용 CCTV 수는 2022년 인구 1만명당 85.64개로 전국 9개 도지역에서 가장 적었고, 도지역 평균인 110.68개와 큰 차이를 기록했다고 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경남의 CCTV 수는 70.05개로 도지역 평균 71.90개와 비슷했지만 2021년 이후부터 전국의 평균 격차와 차이가 더 벌어졌다. 이에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2026년까지 총 136억원을 들여 2000여 대의 지능형 CCTV를 교체 설치하겠다고니 사정이 좀 더 나아지겠다 싶다.

도내 CCTV 개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한다는 것은 자칫 도민 대상 범죄의 예방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가뜰이나 지난해 경남도의 지역안전지수 중 범죄 분야가 최하위권인 4등급을 기록했고, 9개 도지역 중 인구 1만명당 5대 주요범죄 발생건수 7위, 경찰서 수 6위, 자율방범대원 수

7위를 기록해 안전·방범 관련 성적이 좋지 않은 터여서 도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박완수 도지사도 “도와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도교육청이 팀을 이뤄 같이 노력해 다음 평가에서는 지역안전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에서 더 면밀히 챙겨야 한다.

과거 망루에서 적이나 주위의 동정을 살피는 일을 초병(哨兵)이 했다면 현대 과학문명 사회에서는 CCTV가 초병이다. 현대의 ‘초병 CCTV’는 수만 명의 안전을 지켜내는 정밀하고도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적재적소의 CCTV 설치와 관리는 주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남도가 지난 1일부터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기 시작한 것도 도내 전 시군 CCTV와 재해재난위험지역 CCTV의 영상정보를 종합해 각종 재난·안전·방범 문제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가 아니었던가. “제가 도지사가 되고 가장 중점을 기울인 분야가 도민안전”이라는 박 지사의 말이 성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방범용 CCTV 설치율을 높이기 바란다.

## 세대공감

## 약자를 경찰에 고소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 효 정

청년노동자

내 나이 27살, 처음으로 고소당해 경찰서에 끌려(?)갔다. 억울했다. 나와 같이 고소당한 이모님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청소하다 부당해고되어 복직 투쟁하고 계셨던 분이었고, 나는 그분을 도와 함께 공장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어주었다. 우리는 2년 5개월을 투쟁했다.

5월 29일 자에 보도되었듯 현장 관리자가 사과하고 업체가 보상안을 제시해 투쟁은 끝이 났다. (잠깐, '투쟁 중단'이라고 표현한 기사에 아쉬움을 표한다. 원직복직을 이루지 못했지만 현장 관리자의 사과와, 일정 수준의 보상안을 받기까지 노동자가 사측의 탄압과 불리한 법적 조건

### 부당해고 노동자 복직투쟁 연대 불공정한 수사 수용하기 어려워

을 이겨내고 싸운 세월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쟁의 끝에 노동자는 억울함을 풀고 한화에서 많은 노동자의 축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 투쟁의 의미나,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기사 제목으로 꼽았다면 훨씬 상황에 부합했을 것이다.)

이 주제로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속 좁고 치졸한 원청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모님과 나에 대한 경찰 고소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트집 잡기다. 우리는 다른 노동조합이 집회신고한 장소에서 사전 협의를 하여 함께 집회했고 담당 정보관도 인지하고 있었다. 하나의 단위에서 신고를 하고 여러 단위가 참여하는 것은 통상적 집회 방식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회사 업무를 방해했

다는 것이다. 우리는 공장 앞에서 현수막과 작은 앰프를 사용했다. 오히려 정체불명의 승합차와 화물차를 끌고 와 시위를 가로막고 현수막을 찢겠다는 등 고성과 협박, 우리를 빈정거리며 영상을 촬영했던 것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원청 관리자들이었다.

인원 수도, 재정적 역량도 많아서 진짜 행사를 방해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각오하고(?) 방해했다면(?) 무엇이 억울하겠는가? 그러나 혼자 해고된 이모님과 내가 만든 종이 피켓과 20만 원 짜리 앰프가 무슨 의도가 있겠는가. 좀 더 많은 언론인과 노동자들 앞에서 사연을 알리고, 회사에 해결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심지어 그들은 수천만 원 무대와 앰프, 화면을 설치하고 경호업체를 대동하여 사업장 안에서 행사를 치렀다. 그 큰 행사를 방해했다고 우기시니 이건 뭐 내 목청에 자부심을 가지란 뜻인지... 황당하게 생각한다.

창원중부경찰서의 과잉수사는 분노스럽다. 수사는 아직도 수개월째 진행 중이다. 나나 이모님이 잘못된 것이 없기에 조사에 응하지 않을까 하다가 가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면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을까 하여 응했다.

그러나 조사 후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담당 수사관은 처벌을 받게 할 여지가 있는 지점을 찾으려고 수사를 하는 듯했다. 그는 사측이 우리를 괴롭힌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다. '괜히 내 시간만 버렸구나!' 회사 측의 입장에 서서 진행되는 듯한 불공정한 수사를 겪으니 경찰조직에 대한 불신감은 실로 커졌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 옳은 일을 하다 권력과 악법에 의해 받는 처벌은 훈장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무기력하게 부당한 처벌을 수용할 생각도 없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독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치졸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기업친화적 창원중부경찰서를 함께 비판해주시요. < 수사과 통보 >



### 구름많다가 낮부터 맑아져

9일 부산 울산 경남은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올라 덥겠다.

미세먼지 보통 초미세먼지 보통

2023년 6월 9일 (음 4월 21일) 기상안내 131



나들이	자외선	피부	냉방	빨래
80	100	60	60	90

맑음	맑은 후 구름많음	한때 비
구름조금	구름많은 후 맑음	천둥번개
구름많음	호리고 비	호리고 비눈
흐림	소나기	호리고 눈

	해돋이/해질		달돋이/달짐
	05:09 19:37		00:01 10:16

### 물때

	밀물		썰물
부산	12:22	-	06:02 18:09
인천	08:33	20:52	02:13 15:04
포항	18:39	-	02:36 -
통영	00:34 12:43		06:44 18:37

### 바다날씨

알바다	풍향	풍속 %	파고m
남해서부	동-남동	5-8	0.5~0.5
남해동부	남서-서	3-7	0.5~1
동해남부	남-남서	4-10	0.5~1.5
동해중부	남서-서	5-10	0.5~1.5
서해중부	남-남서	3-11	0.5~1.5
서해남부	남동-남	5-8	0.5~0.5

### 주간날씨

	10(土)	11(日)	12(月)
부산	☀ 19-25	☁ 20-26	☁ 20-26
울산	☀ 17-27	☁ 18-27	☁ 19-27
진주	☀ 17-27	☁ 17-28	☁ 18-28
김해	☀ 18-27	☁ 19-28	☁ 20-28
창원	☀ 18-26	☁ 18-27	☁ 19-27
통영	☀ 18-25	☁ 19-25	☁ 19-25
대구	☀ 18-30	☁ 19-29	☁ 20-30
세종	☀ 18-30	☁ 19-29	☁ 19-27
서울	☀ 18-28	☁ 19-28	☁ 19-27
제주	☀ 19-27	☁ 20-27	☁ 20-26